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제도적 기반 모색

이소영*

*충북연구원

e-mail:sylee@cri.re.kr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ublic Sector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였다. 첫째,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환경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진단하였다. 둘째, 충청북도 시멘트·반도체 산업 등 지역 다배출 업종 분석을 통해 지역 차원의 구조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주요국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공공부문이 직면할 정책적 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충북 지역 기업의 직접적 부담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가치사슬을 통한 환경의무 강화가 중소기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원·거버넌스 강화·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해야 한다.

1. 서론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핵심 정책 목표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는 전 세계적 규제 강화 추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단순한 행정 주체를 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을 선도 할 책임이 요구된다. 한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공공부문 전략과 실행력 강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검토하고, 감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2.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제도적 기반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공부문에 특화된 규정과 실행 장치는 제한적이다. 충청북도 사례 분석에서는 산업공정 배출량의 대부분이 시멘트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이 드러났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지역 차원의 정책 개입과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지방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 공공부문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충북 지역 산업은 단기적으로 국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사슬을 통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배출 감축 의무화를 포함한 법·제도 정비, 재정·기술·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앙·지방·민간이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 확립,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은 탄소중립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전환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1] 충청북도 공공부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조사 대상

항목	내용
조사 방법	한국환경공단 전수조사 자료, 도 산하기관 배출량 조사자료, 지역 통계자료 참고
조사 대상	충청북도 소속기관
대상 기관	17기관
표본 수	47개소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2023), 공공부문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